

민주 “송영길 귀국·탈당 결정 존중…사건 신속 규명되길”

지도부 ‘돈봉투’ 파장 차단 총력
비명계, 지도부 총사퇴 주장
국힘 “평계만 가득한 꼬리 자르기”
호남 민심 민주당 실망감 확산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몸살을 앓는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귀국 및 자진탈당’으로 일단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이재명 데칼코마니’라고 비판하면서 ‘탈당은 꼬리 자르기’라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즉시 귀국’은 물론 ‘자진탈당’ 입장까지 밝히며 따라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송 전 대표는 당 대표 시절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자신이 정했던 대로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온다’는 말을 실천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면까지 말하기는 거창하지만, 몰육이 적은 사람이 임은 보증한다”며 송 전 대표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송 전 대표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귀국을 계기로 사건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

게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파장의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23일 온라인 회의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을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정당 혁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당 혁신, 정당 개혁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내년 총선 공천에 강력한 혁신 바람이 불어오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송 전 대표 거취와 별개로 당 차원의 보다 강력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당의 자체 진상조사는 물론 지도부 총사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돈 봉투 명단’에 당계는 20명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검찰 수사에만 맡겨두는 것은 당의 ‘직무 유기’라는 주장이다. 원내 제1당이 자체 자정 기능이 없어 검찰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겠느냐는 것이다. 당 윤리감찰단 산하에 외부 인사들로 꾸린 자문기구를 뒤서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는 대중 넘어갈 성격이 아니며, 지도부 총사퇴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23일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

어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핑계와 핍수만 가득한 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에 불과했다”며 “정치적 책임을 운운했지만 결국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꼬리자르기 탈당에 그쳤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돈 봉투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당선자인 송 전 대표 자신”이라며 “민주당 역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송 전 대표가 탈당한다고 해서 받았던 돈이 증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재량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문제 핵심을 밝혀야 할 송 전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허탈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호남 출신의 유력 정치인으로 꼽혔던 송 전 대표가 전대 돈 봉투 의혹과 관련, 탈당을 선언하는 등 사실상 정치적 파산 처지에 처하자 호남 민심을 쓸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남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5선을 역임하고 당 대표까지 지내며 차기 주자로까지 꼽혔지만 그가 아직까지 의혹이지만 ‘돈 봉투’라는 정치권의 뒀을 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전대 돈 봉투 의혹 사태로 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의 실망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지역의 차기 주자로까지 꼽혔던 송 전 대표가 이번 사태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현지시간) 파리 3구 한 사무실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 의원들 송 전 대표 겨냥 연일 강경 발언

신정훈 “의원 전원 진실 고백하자”
송갑석 “마땅한 책무 저버려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둘러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민주당 텃밭인 호남 국회의원들이 연일 소리를 높여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고흥 출신인 송 전 대표의 최대 정치 기반이 호남이었던 만큼, 호남 내부에서 ‘음침마속’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주·화순 선거구인 저 신정훈 국회의원은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는 것을

저의 인격과 명예를 걸고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힌다”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이 모두 저와 같이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부패정당의 꼬리표를 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잠담한 심정이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금 검찰이 흘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돈봉투 명단은 아무 실체도 근거도 없다. 제 이름도 거기에 올라 있다”고 전했다. 또 “오늘부터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 모두 저처럼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결백하면 결백하다는 입장문을, 죄가 있다면 죄를 밝히고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고백문을 발표하는 진실고백 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송갑석(서구갑) 의원은 지난 19일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녹취록을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지금 당의 도덕성과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송 전 대표 본인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당이 치명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사태 수습을 위한 마땅한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졌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면서 “이번 녹취록을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지금 당의 도덕성과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정의 쌍특검 패스트트랙...27일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통과시키는 공조를 본격화 한다. 광산도 전 의원 등의 대장동 일당 뇌물 수수 의혹을 규명할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힐 ‘김건희 특검법’ 조기 처리를 위해 손을 잡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0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 끝에 오는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 정의당은 일단 26일까지 법사위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은 상태다. 정의당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여당이 애초 ‘50억 클럽 특검’을 수용할 수 있을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점점 그 입장이 후퇴하고 있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게 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 추진이 유력해 보인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민주당(169석)으로선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정의당(6석)이 협조하면 가결에 성공할 수 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선(先) 검찰 수사’ 입장을 고수하던 정의당에 공조를 촉구해 온 민주당으로서는 큰 고비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민주,尹 방미에 “구설수·외교참사 더는 안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거둬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민 방문을 하루 앞둔 23일 “그간 정상 외교에서 벌어진 난맥상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외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거둬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은 대통령의 구설수나 외교참사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면서 “대통령은 전역 대결에 뛰어들려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우려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윤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적었고, 추미애 전 법무

부 장관은 “미국 국민 방문 외교에서 나라 곳간 다 털리지 않고 어떤 실리를 가지고 올 것인지 궁리를 해야 할 때”라고 썼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휴전 상태”라며 “사실상 전시(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기에 군수물자에 대해 적정 목표가 유지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미국 국민 방문에서) 모든 정부가 해온 기본의 기본을 다스 강화하는 것이 이상 특별히 무엇이 될지 의구심이 있다”면서 “모든 정부가 확장형 한미동맹을 지향해온 만큼 내실 있는 대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란과 관련, 정부가 외국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11**

환경부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가뭄, 함께 노력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뭄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부족할수록 아끼고 나누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절수기 사용, 수압조정, 양치컵 사용하기, 샤워시간 줄이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에 힘을 보탭시다.